

김진표 국회의장, 정치개혁 로드맵 제시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 특위 출범”

“선거법 개정안 만들어
전원위 심의·토론 추진
국민께 개헌 일정표 설명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등 개헌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 등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 까지도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부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

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형 개헌을 두고는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

혔다. 김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 감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을 조사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의 의지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 주의를 기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현수막 사라질 듯

시의회, 탄소 발생 유발
현수막 개척 없기로

‘재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등 앞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개척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개척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현수막 개척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해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1일과 12일 양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완주군의회 제27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징역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농업·농업외 용도지역(취부여용종양양종양 재가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 오염원을 제거하고, 취약한 부지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도 첫 단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인 만큼 우리 완주군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응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 수 있도록 응크렸던 완주 경제가 더 멀리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도를 시작하며 완주군의회는 ‘세이공청(洗耳聽)’의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모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원주=이중복기자

강태창 도의원,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포럼 감사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최근 서울을 립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년도 연도상 시상식’에서 수상스포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포럼(협회장 박동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협회 측은 “강태창 의원은 평소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상스포츠 저변 확대, 꿈나무 발굴과 육성, 종목 발전과 대회 유치, 군산수상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 등 협회 및 종목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은 “앞으로 더욱 기여하여 지역 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기자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올바른 방향·해법 모색

전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전주2)은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개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장오 나선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전주)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4단계(제1기: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 매각 실행기, 제3기: 개발 준비기,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무리)로 구분해



1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

분석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주체인 (주)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 건설자금보증현황, 대한방직부지 부동산권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리타워와 비교한 후 대한방직 부지개발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대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공간사회가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 및 타 시도 도입사례를 소개해 전주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연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주)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빅빅’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 열고 개발 방안 모색 개발이익 환수 행정 방안 마련·사전협상 결과 공개 등 강조

지역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두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시 집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고창)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고 지적하며,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및 사업 이행 점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성국 전주시의회 의원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논의 끝에 의결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하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제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 및 지침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증(회차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안했다. 네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명연

도의회 의원(전주0) 역시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보다 상회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정훈 도의회 의원(무주,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1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던 과거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 지리를 빌어 이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1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지리가 지속적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 전 대통령과 2년만에 재회

출소 14일 만... 양산 사저 들러 새해 인사
김 전 지사 축 “건강·안부·덕담 나눠”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지 888일 만으로, 약 2년 만의 재회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배우자 김정순씨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달 28일 김 전 지사가 출소한 지 14일 만이다.

김 전 지사 측은 설을 앞두고 새해 인사차 문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예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김 전 지사 내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 새해 덕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울러 “오랜만에 만나신 거라 밀린 얘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는 “시간을 가지고 또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본인의 특별사면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틀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전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 방문한 뒤 이날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에 앞서 양산 봉도사도 방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 25일 부산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서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별사면된 김 전 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오는 5월4일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면 오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전복 유치 위해

박용근 도의원, 델리프랑스 아카데미 유치 간담회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델리프랑스 아카데미’ 전복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프랑스 제빵 아카데미 시설 구축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근 의원은 “선진 국가의 밀 관련 전반의 기술과 인력들을 통한 국내의 밀 산업군의 발전과 한국 베이커리 산업군 종사자들에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델리프랑스 아카데미를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를 통해 고용창출, 생

산유발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델리프랑스’ 그룹은 1919년에 설립한 밀가루 생산기업으로 시작되어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최대의 제분업체로 성장했다. /김재훈기자